

대전광역시의회 공고 제2017-109호

「대전광역시교육청 공익신고 보상금 지급 조례」가 일부개정됨에 따라 그 취지와 내용을 시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대전광역시의회 회의 규칙』 제21조의2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7월 11일

대 전 광 역 시 의 회 의 장

## 대전광역시교육청 공익신고 보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예고

### 1. 제안 이유

현행 조례는 「공익신고자 보호법」과 동일한 “공익신고”라는 용어를 사용함으로써, 법령에 의한 공익신고와 조례에 의한 부조리행위 신고에 있어서 시민에게 혼란을 주고 있어, 관련 용어를 정비하고 신고가 활성화 될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정비함.

## 2. 주요 내용

가. 공익신고 용어를 부조리신고로 용어를 정비함.

나. 부조리행위 신고를 한 신고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대전광역시교육감에게 보호 조치를 강구하도록 정함(안 제7조).

## 3. 의견제출

가.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7년 7월 17일 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대전광역시의회의회장(참조 : 교육수석전문위원실)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의견제출 사항

(1)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 및 반대의견과 그 사유)

(2) 의견제출자의 성명·주소·전화번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성명 기재)

다. 의견 제출할 곳 : 우35242 / 대전광역시 서구 둔산로 100

대전광역시의회 의회사무처 교육수석전문위원실)

(전화 042-270-5243, FAX 042-270-5249, E-mail : 1052jjh@korea.kr)

라. 의견제출 방법 : 서면, 전화, FAX, 컴퓨터통신, 직접방문 등

## 4. 개정 조례안 : 붙임

## 대전광역시교육청 공익신고 보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전광역시교육청 공익신고 보상금 지급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대전광역시교육청 공익신고 보상금 지급 조례”를 “대전광역시교육청 부조리신고 보상금 지급 조례”로 한다.

제1조 중 “공무원 등”을 “공무원등”로 하고, “부조리 행위”를 “부조리 행위”로 하며, “공익 신고자”를 “사람”으로 한다.

제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무원등”이란 소속기관 공무원, 교원 및 교육공무직원을 말한다.
2. “부조리 행위”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가. 업무와 관련하여 금품을 수수하거나 향응을 제공받은 행위

나. 자신의 직위를 이용하여 부당한 이득을 얻거나 소속기관의 재산이나 물품 또는 그 밖의 재정상에 손실을 끼친 행위

다. 자기 또는 타인의 부당한 이익을 위하여 공무원등의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하는 부정청탁 및 금품 등의 수수 행위

라. 그 밖에 대전광역시교육청(이하 “교육청”이라 한다)의 청렴도를 훼손하는 행위

3. “소속기관”이란 교육청 본청, 직속기관, 교육지원청, 「초·중등교육

법」에 따른 학교 및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을 말한다.

4. “신고자”란 부조리행위를 신고한 사람을 말한다.

5. “보상금”이란 신고자 중 신고내용이 부조리행위를 근절하는데 기여하여 깨끗한 대전교육 풍토를 조성하였다고 인정되는 사람에게 지급하는 금전을 말한다.

제3조를 삭제한다.

제4조제1항 중 “교육감”을 “대전광역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으로 하고, “위원회”를 “대전광역시교육청 부조리행위신고보상금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자”를 “사람”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③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부조리행위 신고에 대한 보상금액 결정 및 지급 대상·시기, 방법 등에 관한 사항
2. 그 밖에 교육감이 심사를 요청하는 사항

제5조제1항 본문 중 “공익신고”를 “신고”로 한다.

제5조제1항 본문 및 단서 중 “부조리 행위”를 각각 “부조리행위”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공익신고”를 “신고”로 한다.

제6조 중 “공익신고”를 “신고”로 하고, “부조리 행위 공무원 등”을 “부조리 행위 공무원등”으로 하며, “공익신고센터”를 “부조리·공익신고센터”로 한다.

제7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7조(신고자의 보호) ① 교육감은 신고를 접수한 즉시 신고자의 인적사항

의 비공개 처리 등 신고자 보호를 위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② 교육감은 신고를 이유로 신고자에게 어떠한 불이익조치를 하여서는 아니되며, 신고자가 불이익조치를 당하지 않도록 필요한 방법을 강구하여야 한다.

③ 공무원등은 제1항에 따른 신고자 인적사항을 비공개 처리한 경우에는 신고자를 알 수 있는 사실을 다른 사람에게 알려주거나 공개 또는 보도하여서는 아니된다.

④ 교육감은 제3항을 위반한 공무원등에 대하여 징계 등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제11조를 삭제한다.

별표 제목 중 “공익신고”를 “부조리행위 신고”로 한다.

##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신 · 구조문 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전광역시교육감 소속 공무원 등의 부조리행위를 신고하는 공익 신고자에게 보상금을 지급함으로써 부조리를 근절하여 깨끗한 대전교육 풍토를 조성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 공무원등 -- 부조리 행위 ----- 사람 ----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무원 등"이란 대전광역시교육감 소속 공무원과 사립학교 교직원, 공·사립 각급학교 및 교육행정기관 소속의 계약직 교직원을 말한다. 2. "부조리 행위"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가. 업무와 관련하여 금품을 수수하거나 향응을 제공받는 행위 나. 자신의 직위를 이용하여 부당한 이득을 얻거나 대전광역시교육청(이하 "교육청"이라 한다)소관 재산이나 물품 또는 그 밖의 재정상에 손실을 끼친 행위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무원등"이란 소속기관 공무원, 교원 및 교육공무직원을 말한다. 2. "부조리행위"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가. 업무와 관련하여 금품을 수수하거나 향응을 제공받은 행위 나. 자신의 직위를 이용하여 부당한 이득을 얻거나 소속기관의 재산이나 물품 또는 그 밖의 재정상에 손실을 끼친 행위 다. 자기 또는 타인의 부당한 이익을 위하여 공무원등의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하는 부정

다. 자기 또는 타인의 부당한 이익을 위하여 대전광역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 소속 공무원 등의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하는 알선·청탁을 하는 행위

라. 그 밖에 교육청의 청렴도를 훼손한 행위

3. "공익 신고자"(이하 "신고자"라 한다)란 부조리 행위를 신고한 자를 말한다.

4. "보상금"이란 신고자 중 신고내용이 부조리를 근절하는데 기여하여 깨끗한 대전교육 풍토를 조성하였다고 인정되는 자에게 지급하는 금전을 말한다.

제3조(지급대상) 보상금은 부조리 행위 신고자중 공익신고 보상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고 한다)에서 지급하기로 결정된 자에게 지급한다.

제4조(위원회 구성 등) ① 신고자의 신고내용에 대하여 보상금 지급 여부를 심사·결정하기 위하여 교육감 소속하에 위원회를 둔다.

청탁 및 금품 등의 수수 행위  
라. 그 밖에 대전광역시교육청(이하 "교육청"이라 한다)의 청렴도를 훼손하는 행위

3. "소속기관"이란 교육청 본청, 직속기관, 교육지원청,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학교 및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을 말한다.

4. "신고자"란 부조리행위를 신고한 사람을 말한다.

5. "보상금"이란 신고자 중 신고내용이 부조리행위를 근절하는데 기여하여 깨끗한 대전교육 풍토를 조성하였다고 인정되는 사람에게 지급하는 금전을 말한다.

<삭 제>

제4조(위원회 구성 등) ① -----  
-----  
----- 대  
전광역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 --- 대전광역시교육청 부조  
리행위신고보상금심사위원회(이하

②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7명으로 구성하고, 외부위원 4명과 내부위원 3명으로 구성하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교육감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 2. (생략)

③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가. 부조리 행위 신고에 대한 보상금액 결정, 보상금액 지급 대상·시기 및 방법 등에 관한 사항

나. 기타 교육감이 심사 요청하는 사항

제5조(신고 및 처리 기한) ① 이 조례에서 정하는 보상금을 지급받기 위한 공익신고 기한은 부조리 행위가 있는 날부터 2년 이내로 한다. 다만 신고자 본인의 부조리 행위와 관련된 경우에는 부조리 행위일로부터 7일 이내로 한다.

② 교육감은 공익신고를 접수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신고사항을 처리하여야 하며, 그 결과를 신고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조사 및 확인 등의 절차에 있어 불

“위원회”라 한다) ---

② -----  
-----  
-----  
----- 사람  
을 ---

1. ~ 2. (종전과 같음)

③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부조리행위 신고에 대한 보상금액 결정 및 지급 대상·시기, 방법 등에 관한 사항

2. 그 밖에 교육감이 심사를 요청하는 사항

제5조(신고 및 처리 기한) ① -----

-- 신고 ----- 부조리 행위 -----

----- 부조리 행위 ----- 부조리 행위 -----

② ----- 신고 -----



가피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0일  
이내에서 연장할 수 있다.

제6조(신고방법) 공익신고는 신고자  
및 부조리 행위 공무원 등의 인적  
사항과 행위 내용을 6하 원칙에  
따라 방문, (전자)우편, 팩스 등의  
방법으로 별지 서식의 신고서를  
작성하여 교육청 감사부서에 제출  
하거나, 교육청 홈페이지 공익신고  
센터를 이용하여 신고할 수 있다.

제7조(신고자의 보호) 부조리를 신고  
받은 관계 공무원은 신고자가 신  
고에 따른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신고자와 신고내용에 대하여 비밀  
을 철저히 보장하여야 한다.

제6조(신고방법) 신고 -----  
-- 부조리 행위 공무원 등 -----  
-----  
-----  
-----  
-----  
-----  
----- 부조리·공  
익신고센터 ---

제7조(신고자의 보호) ① 교육감은  
신고를 접수한 즉시 신고자의 인  
적사항의 비공개 처리 등 신고자  
보호를 위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  
다.

② 교육감은 신고를 이유로 신고  
자에게 어떠한 불이익조치를 하여  
서는 아니되며, 신고자가 불이익조  
치를 당하지 않도록 필요한 방법  
을 강구하여야 한다.

③ 공무원등은 제1항에 따른 신고  
자 인적사항을 비공개 처리한 경  
우에는 신고자를 알 수 있는 사실  
을 다른 사람에게 알려주거나 공  
개 또는 보도하여서는 아니된다.

④ 교육감은 제3항을 위반한 공무  
원등에 대하여 징계 등 필요한 조

	<u>치를 강구하여야 한다.</u>
제11조(징계) ① 신고를 받은 공무원 이 신고자의 신분이나 신고내용을 누설한 경우에는 징계 등의 조치 를 할 수 있다. ② 신고자가 공무원인 경우 허위 내용을 신고한 사실이 밝혀질 경 우 신고자에 대하여 징계 등의 조 치를 할 수 있다.	<u>&lt;삭 제&gt;</u>
[별표] 공익신고 보상금 지급 기준(제8조 관련)	[별표] <u>부조리행위 신고</u> -----

## 관계법령

### □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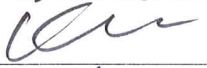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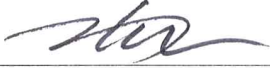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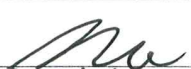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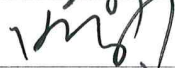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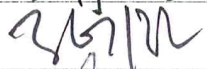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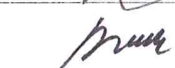

제3조(공공기관의 책무) ① 공공기관은 건전한 사회윤리를 확립하기 위하여 부패방지에 노력할 책무를 진다.

② 공공기관은 부패를 방지하기 위하여 법령상, 제도상 또는 행정상의 모순이 있거나 그 밖에 개선할 사항이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즉시 이를 개선 또는 시정하여야 한다.

③ 공공기관은 교육·홍보 등 적절한 방법으로 소속 직원과 국민의 부패 척결에 대한 의식을 고취하기 위하여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④ 공공기관은 부패방지를 위한 국제적 교류와 협력에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대전광역시교육청 공익신고 보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발 의 의 원 서 명

	의 원 명	서 명	비 고
1	송 대원		
2	이정원		
3	김정수		
4	구 의재		
5	조원준		
6	박성원		
7	박정호		
8	조진리		
9	정기현		
10	이현영		
11	황상숙		
12	박혜리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